

최근 미공군 기지가 있는 군산에서 미군병사에 의해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공기총에 맞은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과 15일 정판용(54)씨와 송윤재(36)씨가 미군의 폭행과 차량에 의해 숨지자 분노한 1천여명의 군산시민·대학생·재야 민주인사들은 군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으로 해산되자 흩어져 시내 곳곳에서 3~4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었다.

이어 20일 공기총 발사사건이 일어나자 군산·옥구 민주화운동협의회와 군산대 총학생회, 군산·옥구 교사협의회, 전북민족 민주운동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는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정면 도발”이라고 규정, “이땅에서 미군이 물러날 때까지 반미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거리에 나서고 있다. 군산·옥구 민주화운동협의회와 최종홍 정책실장은 “살인 방화 강간 폭력 등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본질적으로 한국인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만행이 저질러진다고 생각하면 마한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고

군산 미군만행 ‘반미’ 불질러

‘범죄온상’속 잇따른 큰 사건에 시민 분노 재판권 행사 0.7%뿐... 한국인 희생 방조

89.2.26

말했다.

한편 24일 오전 11시 군산의 료원에서 장례식을 마친 정판용씨. 장례행렬이 군산시청과 경찰서 앞을 지나 군산역 광장에서 노제를 가진 뒤 옥구군 나포면 천주교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날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이 나와 정씨의 장례행렬을 지켜보았다. 경찰은 지난 15, 17일의 규탄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것과는 달리 장례행렬을 막지는 않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67년부터 87년까지 21년 동안 한국에서 미군범죄가 모두 3만9천4백52건이 발생해 미군 4만5천1백83명, 연평균 2천2백여명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에서 저질러진 대표적인

미군범죄들은 미군병사 3명의 19세 소녀 강간(54년 11월6일), 한국여인의 희롱을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61년 4월2일), 15세의 고교생 정조준 사살(71년 4월25일), 20대여인 2명 연쇄살인(77년 6월12일) 등이 손꼽힌다.

지난 20일 길가던 윤춘호(33·군산시 산북동 신성마을)씨에 대한 미공군 존 D 윌슨(26)상병의 공기총 발사는 지난 71년 15세의 고교생 사살사건과 너무도 흡사해 군산시민들에게 18년전의 불행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었다는 것.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길을 가다가 미군병사 3명이 그들이 세들어 사는 집 2층 베란다에서 30m쯤 떨어진 거리에 걸어가던 여자 2명을

향해 공기총을 겨냥하는 것을 보고 “쏘지말라”고 손을 흔들어 제지한 뒤 걸아가는 순간 윌슨상병이 겨냥해 쏜 공기총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았다.

지난 71년 4월25일에는 미공군 군산기지 보조병이 고교생 2명에게 놀림당했다는 이유로 칠조망에서 50m나 떨어져있던 서홍석(당시 15세·군산고2)군을 향해 정조준, 사살한 바 있다.

군산 북음교회 조용술(69)목사는 “일제의 강점시대에 독립운동가에게 그처럼 혹독하고 잔혹한 행동을 한 일인들도 일반 시민에 대한 폭행이나 시비는 별로 없었다”며 “주한미군이 아직도 점령군의 오만한 자세로 한국인들에게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다”고 말했다.

군산시민들은 이 같은 미군의 만행 뿐만 아니라 가공할 핵무기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핵 탑재가 가능한 공격용 전투기 F-16기 48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산 미공군기지는 1백여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노병구 사회부장은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군산에 놓아두고 군산을 대중국 무역항, 서해안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민들은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굴욕적인 내용이 미군들의 만행을 비호하고 더 큰 범

죄를 유발, 한국인의 희생을 방조하고 있다”며 미군만행과 함께 정부의 대미 굴욕자세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이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가차없이 잡아 가두고 미군만행을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세례를 안기는 정부가 한국인을 죽이고 강간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6년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범죄의 0.7%에 불과한 2백34건이며 이는 나토 32%, 일본 32%, 필리핀 21%의 재판권 행사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미 예측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광주항쟁이 일어난 80년에는 1천6백79건의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은 단 한건의 1차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했다.

군산대생 이희준(20·법학2)씨는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미군과 미국핵무기가 우리의 생존권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우방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산=장세환 기자〉